

투데이 칼럼

북-러 무기거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 경제와 안보에 대한 보답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동맹화한 한미일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에 없는 가운데에도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북러 두 정상이 만난 곳은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 응축된 핵심 우주기지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두 차례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일이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군용 전투기 제조공장도 둘러봤다.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 원성의 마지막 퍼즐을 러시아가 채워준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해적으로 30분이나 앞서 회담장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맞았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먼저 최신 로켓 실험장부터 찾았다.

우주기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던 김 위원장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직접 묻기도 했다. 현장에는 북한군 내 '미사일 3인방'으로 불리는 간부들이 수행했다. 북한이 낙후된 동창리 발사장과 두 차례 연이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천리마 1형' 로켓이나 '민리경 1호' 위성 개발을 지원하거나, 아예 우주 발사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우주기지를 둘러본 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반제국주의 동맹을 약속했고, 푸틴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식량 지원, 북한 노동자 파견 등도 두 정상이 다뤘을 거란 분석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 생산 공장 등을 잇따라 둘러봤다. 러시아 국방

장관과 따로 만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간에 평양을 찾을 것을 초청했고, 푸틴은 이를 수락해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은 탄두부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과 공개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무기 거래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신도 찬성했던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방러 보전,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담재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하다. 옛 소련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1990년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6년 뒤 삭제한 북-러 지중 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났다.

군사 동맹에 가까운 밀월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서의 신병전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뒤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택한 건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추진했던 대미 관계 정상화의 기대는 접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모두 중국까지 끌어들여 북중러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관망하는 모습은 중국이 변수다. 대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누는 건 달갑지 않지만 북러 양국의 밀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계속적인 군사 협력 강화와 독자 제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반도에서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는 상당 기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노란봉투법 엇갈린 평가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산업현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측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용어를 의미한다.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여파에 대응해 만들어진 법이다. 한 시민이 4만7000원이 든 노란봉투를 언론에 보낸 사건이다. 이는 파업 참여로 회사에 47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대한 국민적 지지의 상징이 됐다.

쌍용차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입은 회사 손실에 대해 상당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5년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아사히방송 판결 이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칙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 규범이 정착했다.

아사히방송과 사내 하청 근로자 사이의 분쟁에서 "아사히방송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일본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법리는 원·하청 간의 노사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미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에 나서게 조치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다.

전북지역 대학 반도체학과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북지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6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명도 없다. 올해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전북지역 대학(대학원 포함)은 총 15곳, 83개 학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64%에 달하는 53개 학과는 전임교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 반도체 관련 학과 전임교원 수는 매년 감소했다. 때문에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관련학과 중 전임교원이 있는 학과 비율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의 경우 국내 전체 반도체 관련 전임교원은 225명으로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11곳·76개 학과 중 43개(56.6%) 학과에 전임교원이 없었다. 지난해는 국내 15개 학교에 반도체 관련학과가 85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임교원 수는 212명으로 전년 대비 13명 감소하면서 전임교원이 없는 학과는 62.4%(53곳)에 달했다.

2023년 올해 또한 전임교원 수가 감소, 국내 전체 반도체 관련학과 교수는 19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반도체 관련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교는 309개교로 이중 관련학과는 총 1,421개다. 반도체 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은 295개에서 309개로 늘었다. 반도체 관련학과도 76개나 늘었다.

반도체 관련 학과는 기계, 전기, 반도체, 세라믹, 신소재, 재료, 전자 계열 등으로 분류된다. 전임교원 수는 5,094명에서 5,0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의 원인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것이다.

반도체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동 성 학대 예방 촉구, 광장 전시된 인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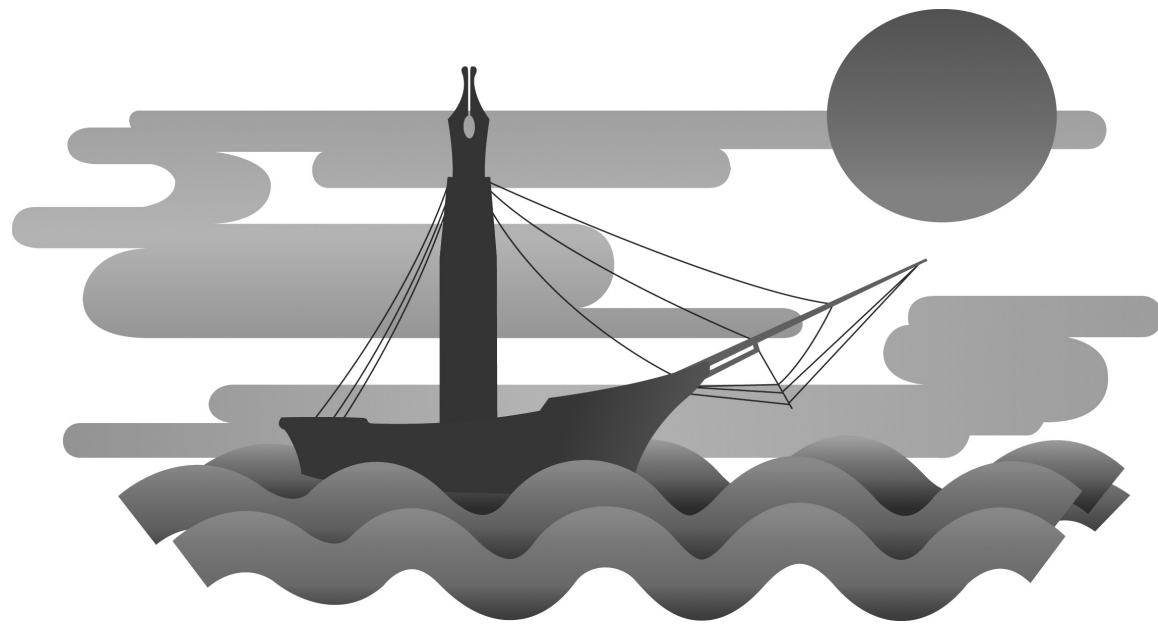
지난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블리바르 광장에 인형들이 전시돼 있다. 아동 성 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과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이 행사는 7번째 이어나고 있다.

아르헨 인권 단체 "새 정부 인권 정책, 과거 회귀 우려"



지난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요 광장에서 인권 단체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이 주최한 주간 행진이 열려 휠체어에 앉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군사독재 기간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차기 정부의 대응과 인권 정책 등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